

# 한국 대학의 현 상황과 기여입학제\*

홍 일식

고려대 총장



## 1. 한국의 대학 현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경쟁 체제 속에서 대학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새삼스러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시장 개방과 정보 환경 속에서 지식과 기술의 생산력은 이제 모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었다.

돌이켜 보건대 19세기까지의 대학은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아탑으로서 고원

한 원리의 탐구에 전념해 왔다. 그런 대학이 20세기에 와서는 산업과 기술의 후방 기지로서 좀 더 현실과 밀착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앞에 닥친 21세기의 대학은 첨단적인 지식과 과학 기술 그 자체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패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핵심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짐을 짊어진 우리 대학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학교육 책임

\* 이 글은 '97년도 대교협 정기총회(2. 12)의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분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만은 차마 하고 싶지 않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더 적합한 진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광복 이후의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은 수량적으로 적지 않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외형 속에 담긴 실질은 참으로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것일 따름이다. 그 내용을 새삼스럽게 들추어 보기조차 민망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재확인하는 뜻에서 여기에 몇 가지 사실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낸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에 21.6명이었지만, 1990년대 초에 와서는 35.4명으로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전용 면적은 1970년에 14.3평방미터였으나, 1990년대 초에는 9.2평방미터로 줄었다. 결국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학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쪽으로 퇴보한 것이다.

외국의 주요 대학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의 대학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적절한 표현이 없다. 교수 1인당 학생수라든가 학생 1인당 교육 경비 등의 주요 지표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치는 미국, 일본, 영국 대학의 그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국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상태에 있다. 대학교육의 환경과 여건에 관한 한 우리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초입 단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과 설비 면에서도 우리 대학들의 실정은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학들이 실험·실습 기자재의 절대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도 사용가치를 상실한 노후 장비 또는 폐기대상 장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 전에 서울공대의 기자재 중 노후한 장비와 폐기할 장비들이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지만, 여타 대학의 사정은 그보다 더하다는 보충 설명에 그만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 재정의 만성적 결핍에 있음을 필자는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이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대학교육을 위한 공공 재정과 사회적 투자는 그와 반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 재정의 만성적 결핍은 교육 여건의 낙후를 초래하고, 낙후된 교육 여건은 대학의 양적 팽창 속에서 그 문제성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옛말에 “生子非難 養子難이요, 養子非難 教子難이라.” 했다. 자식 낳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르기가 어렵고, 자식 기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기가 더욱 어렵다는 말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민족의 내일을 맡기려면 대학이 당당한 제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대학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번민하는 이 시간에도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필자는 지난달 5년만에 중국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서 들려본 중국 대학의 변화상이 모두 놀라운 것이었지만, 하얼빈 공대에서는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준

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팔목상대라는 표현을 넘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 발전과 재정의 확충을 위한 갖가지 과격적인 모색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연구, 교육의 열기 앞에서 필자는 섬뜩한 전율마저 느껴야 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한국의 대학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대학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인가.

## 2.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향하여

우리 민족이 오늘날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밝은 미래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여건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적정한 교육투자 없이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만이 이루어진 데 따른 대학교육의 부실화는 이제 전 사회적인 역량의 결집에 의해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자는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요인을 입학 허가를 위한 평가 요소의 일부분으로 반영하는 제도의 시행을 제창하는 바이다.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독특한 교육이념과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이념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권한은 대학 자율의 핵심이며, 사학의 특수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는 국립·사립 또는 대학별 구분 없이 입시 점수 위주의 경직된 선발방법이 강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하고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의 권한이 법적으로 제약되어 왔다.

필자가 총장 직을 맡고 있는 고려대에서는 이러한 선발방법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사회를 위한 공익적 기여를 적극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1994년부터 입시 점수 이외의 요소를 반영하는 학생 선발 제도를 추진, 시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해 특례입학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다대한 희생을 치른 농어촌의 국가적 기여를 존중하는 뜻에서 농어촌 자녀의 특례입학 제도 또한 마련했다. 아울러 인도적 입장에서 장애자에 대한 배려를 입시에 반영했고, 인성교육을 통한 시하는 세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자 선행자에 대한 입학 특전 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모든 고려 사항들은 입시 점수 외의 특례 내지 특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러한 특전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특전은 얼마간의 점수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기여와 가치에 대한 도덕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유형, 무형의 공익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소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물질주의자가 아니지만, 물질의 가치를 편협하게 부정하고자 하지 않는다. 물질과 재화는 인간의 창의와 노동의 산물이며, 정당한 노력과 경영에 의해 얻어진 재화를 공익적 가치를 위해 쾌척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찬되어 마땅한 일이다.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은밀하게 거래되는 검은 돈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겠지만,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멋떳하게 기탁되고 투명

하게 관리되는 재화를 백안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정의 수입원은 학생납입금, 법인전입금, 국고지원금, 사회기부금 등이다. 그러나 학생등록금 인상 저항, 법인전입금의 미약, 국고지원 미약 등으로 대학 재정난은 매년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성적 불량자의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의 국내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불건전한 과외 교육비로 막대한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의 여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대학에 유치함으로써 심각한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학의 특수성 구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입시제도를 다양화하여 그 대학의 필요와 기여 등 다양한 준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학교에 토지, 건물, 금전 등을 무상 기부하는 등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직계자손이 당해 학교에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각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여입학제는 사학의 재정난 완화는 물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시행상의 공정성, 합리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기여입학제의 부작용에 대한 예방장치 및 투명한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현재의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1~2%의 범위 안에서 추진한다면, 기여입학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여입학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의 입장도

있으며, 때로는 반대론이 더 논리적인 듯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여입학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기여입학을 입학조건 부 기부금제로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임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기여입학에 대한 가장 큰 반대 이유의 하나는 ‘평등’ 이념의 체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비판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건강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언제나 순수한 이상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 발전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단순 논리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상에만 매달려서도,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를 구현하는 지혜이다.

기여입학은 바로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이상과, 교육의 질적 저하라는 현실간의 갈등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의 하나일 수 있다. 오늘의 대학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여입학은 이러한 다양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것으로 대학 재정 적자를 모두 충당하려는 대학도 없으려니와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기여입학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노력 및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어우러질 때, 우리의 대학과 국가는 발전의 전기를 잡게 될 것이다.

기계적 평등의 척도에만 집착하여 공익에 대한 유형, 무형의 기여를 일체 배제하고 점수에 의한 획일적 규제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대체 무엇인가. 현재에도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도피성 유학의 확산 및 불건전한 조기 유학의 만연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의무의 포기일 뿐 아니라 해외로의 교육비 유출에 따른 국부의 낭비 및 국내 교육재정의 심각한 위축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아울러 천문학적 액수의 사교육비, 특히 입시대비 과외교육비는 교육여건의 개선 및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는 무관한 영역에서 낭비되고 말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대학들이 하나둘씩 공동화하고 대학교육의 내실이 고갈된다면, 이야말로 '병은 고치고 사람은 죽이는' 치료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대학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국방비를 줄여서 대학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혹은 산업자금을 돌려서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쓸 수 있겠는가. 그 어느 것도 어렵다면 지금이야말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 사회적인 역량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는 것을 필자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인 원칙과 엄정한 규범에 따라 대학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 3. 기여입학제 시행의 요건

다시금 강조하건대 기여입학은 기부금 입학이 아니다. 기여입학이란 우리보다 오랜 대학사를 지닌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선택적 학생선발의 일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획일적 점수 척도에 의한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공익적 공헌자들에게 적용하는 부차적 평가요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교육에 대한 재정적 기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학의 원칙과 규범이 분명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사학의 재정 위기가 아무리 극에 달하였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여입학은 각 부문의 국가·사회 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일반 학생선발 정원과는 별도로 1~2% 범위에 국한하여 허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일반 경쟁 선발에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한편, 교육재정의 확충에 따른 공익은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긍정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기여입학과 관련된 재정 수입은 철저히 교육시설 투자와 장학금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독관청의 정기 및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가장 핵심적 요인은 기여금의 수입·관리에 부정 또는 부당한 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만약 기여금이 일반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쓰인다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학 스스로가 자율의 권위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학은 법인과 함께 일반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기여금은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인재 양성을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

에서 그 참된 의미가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여입학제의 성패만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기여입학제에 의한 대학 재정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학 지원을 축소함이 없이, 보다 많은 재정을 지방대학 및 군소 대학 육성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재정이 백여 개가 넘은 전국 대학에 분산됨으로써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기여입학제에 의한 민간 지원이 활성화된다면 정부는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의 운용에서 좀 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터이며,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이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 4. 맺는 말

필자는 기여입학제가 약 10년 전에 처음 거론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중론을 제시한 분들의 의견 가운데 제시된 평등성, 도덕성, 교육적 역기능 등과 같은 개념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제아무리 우리 사회 모든 부면에 만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회의 도덕성과 지성의 최후 보루인 대학에서만큼은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기를 희구하였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기여입학은 그만큼 이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충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기여입학제라는 오랜 숙제를 오늘날의

대학교육 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성원의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풀어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동시에 미래의 우리 사회와 민족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재정의 압박 속에 고민만을 거듭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책무를 외면할 수 없다. 기여입학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려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불식하거나 개선하고, 그 순기능적 효과를 증대시키느냐를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역기능적인 문제 제기만으로 기여입학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차원으로부터 한 단계 승화된 자세이기도 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내는 결론은 대학 운영의 일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학이 이 나라의 미래를 감당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신뢰와 자기규율의 능력을 선언할 수 있는 가를 판가름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탈락하고 붕괴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책임이다. 대학이 낙후되고 붕괴하여 국가적 경쟁력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포함한 이 사회 지도층 모두의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학과 민족의 앞날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홍일식/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연세대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현재는 고려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중·한 대사전편찬』, 『21세기와 한국전통문화』,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등이 있다.